선거명	제21대 대통령선거							
후보자명	황 교 안	황 교 안 기호 7 소속정당명 무소속						
공약순위 : 1	제목 : 부정선거	척결		분	야	정치・행정・사법		

- 선거를 통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("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,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")을 명실상부하게 구현
-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무결성 확보
- 국민의 참정권 회복
- 공명정대한 선거 시스템 구축

□ 이행 방법

- 부정선거 범죄자 처벌 확행 ⇨ 감형없는 중형 법제화
- 공직선거법 개정 □ 사전투표제 폐지, '당일 투표·당일 수개표'실시
- 선관위 해체 ⇒ 행정안전부 내 선거국 신설, 감사원의 감사 대상 포함
- 선거관리 조직과 사법부 간 유착관계 원천 차단 제도화
- 선거관리 민간기관 구성 및 지원
- •매 선거 후 무작위 샘플링 조사를 통한 검증으로 선거 무결성 확보
- •국민 의식개혁 운동본부를 설립, 선거 및 선거 감시 교육 강화

□ 이행 기간

- •취임 즉시 지난 선거 무효소송 전면 재수사 및 국제 공조수사 진행
- 3개월 이내 공직선거법 전면 개정 추진
- 6개월 이내 새롭고 투명한 선거 시스템 및 감시 시스템 구축

- 재원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항목으로 필수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예산 배정
- 선관위 폐지 등 공약 이행시 오히려 국가재정을 절약하는 효과 수반 예상

선거명	제21대 대통령선거						
후보자명	황 교 안	황 교 안 기호 7 소속정당명 무소속					
공약순위 : 2	제목 : 반국가 세력 척결			분	야	정치・행정・시법	

- 대한민국의 헌법 핵심 가치인 자유 민주주의 수호
- 근로자 권익보다는 정치투쟁 및 일감 독점 등 불법 행위를 일삼는 민노총 단속을 강화, 근로자들의 부당한 권익 침해 원천 차단
- •위헌 정당판결로 해산된 통진당 잔존 세력의 재 발호 저지
- 학생 및 교사들을 의식화, 주체사상을 주입하는 등의 전교조 정치활동 엄단

□ 이행방법

- 민노총 해체
 - 건전 노조 육성 및 지원
 - 노동운동을 앞세운 간첩 행위 및 불법 행위 가중 처벌
 - 민노총 소속이 아닌 근로자들에 대한 방해 협박 차단 시스템 구축
 - 민노총 및 유사 단체의 정치 행위 엄단
- 통진당 잔존 세력의 반헌법 행위 처벌
 - 해산 정당 감시 활동 체계화
 - 유사 정당 즉각 해산 추진
- 전교조 해체
 - 법외 노조 제도화로 불법행위 차단
 - 학교 현장에서의 비교육적 행태를 적발하고 개선 및 처벌
 - 전교조 세력의 지하 불법행위 색출
 - 편향·왜곡된 반국가적 교육 단호히 척결

□ 이행기간

•취임 즉시 추진하여 임기 내내 지속적으로 시행

□ 재원조달방안 등

• 재정보다는 정책 집행 의지와 추진력이 중요한 공약으로 최우선 재원 배분

선거명	제21대 대통령선거							
후보자명	황 교 안	기호	7	소속정 당명	무소속			
공약순위 : 3	제목 : '강소기업	천국 <i>코</i> 리(아'로 희망 경제	분 야	산업자원· 건설교통			

목 표

- 전체 기업중 99%를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, 열악한 조업 환경과 수익 창출 한계에 봉착한 중소기업 생태계를 혁신, '강소기업 천국 코리아' 구현
- 한국형 '히든 챔피언' 10만 개 강소기업 육성

□이행방법

- 중소벤처기업부를 '4차산업혁명부' 로 개편하고 장관을 '부총리' 급으로 격상
 - 기재부, 산자부, 중소기업은행 등에도 산재해 있는 중소기업 업무 통합
- 중소기업 자금 지원 프로그램 가동
 - 정부 매칭펀드 조성
 -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정부가 보증하는 무담보 신용대출 자금 지원
 - 패자 부활 방식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도입, 실패 기업인 재기 기회 부여
 - 공정거래위에 '중소기업 기술보호단'을 설치. 중소기업 기술 보호
- •청년 마이스터 100만 명을 양성, '명장(meister)의 나라'
 - 특성화고·기술대학 등에 첨단 기술학과 활성화
 - 광역자치단체별 산·학·관 연계 기술교육 시스템 구축(매년 10만 명 양성)
 - 마이스터 대체복무 제도 도입으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인력 공급 원활화

□ 이행기간

•취임 즉시 추진하여 임기 동안 지속적으로 시행

- 일반, 특별 회계 및 기금 예산 편성 확대
-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세입 확충

선거명	제21대 대통령선거						
후보자명	황 교 안 기호 7 소속정당명 무소속						
공약순위 : 4	제목: '깜놀 10억 창	업배 틀 365'	로 창업 자원	분	야	재정· 경체 · 복지	

목 표

- 창의와 열정을 겪비한 스타트업 지워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
- 스타트업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

□이행방법

- '깜놀 10억 창업배틀 365' 를 개최하여 창업 지원
 - 미스트롯형 경쟁을 통해. 매년 365개의 스타트업에 창업자금(10억원) 지원
- 유니콘으로 커나가도록 '유니콘 웨이' 및 '창업 멘토링' 프로그램 운영
- 스타트업을 가로막는 규제 해소 및 규제 관련 법률 무료 상담 서비스 제공
- '지식재산권 은행'을 설립, 스타트업들의 지재권을 국내외 대기업들로부터 보호
- •국내외 유망 지식재산권을 국가가 구입, 스타트업 기업들이 사용하도록 조치
- '지재권 법률상담센터'를 설립, 스타트업들에게 무료 상담 서비스 제공
- 벤처기업 선정의 지역 할당제를 도입, 지역 경제를 활성화

□ 이행기간

•임기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

□ 재원조달방안 등

• 재정 지출시기 조정 및 재량지출 조정을 통해 재원 마련

선거명	제21대 대통령선거							
후보자명	황 교 안	기호	7	소속정당명 무소속				
공약순위 : 5	제목: '초일류 ' - AI·로봇·양자			분	야	과학기술 · 정보통신		

-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최첨단 기술 강국으로 재도약
- 반도체 · AI 중심 '초격차 핵심 클러스터' 전국 5개 거점 구축
- '국가 AI 육성 프로젝트'를 통해 첨단기술 인재 양성

□이행방법

- '초일류 정상국가' 국가비전 선포 및 법안 발의
- 전국 5개 '초격차 핵심 클러스터' 지정
- 슈퍼컴 · K 우주 · 로봇 · 양자 컴퓨터 진흥 프로그램 본격 가동
- IT · BT(생명공학) · CT(문화기술) 분야 R&D 투자 및 규제 샌드박스 확대
- 글로벌 첨단기업 투자유치 패스트트랙 도입
- '창업배틀 365' 와 연계된 산업화 시스템 도입
- '초격차전략산업보호법', 'K-우주개발진흥법' 제정
- 대통령 직속 '국가경제도약위원회'를 설치

□ 이행기간

•취임 즉시 추진하여 임기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

- 재정 지출시기 조정 및 재량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마련
- '초격차전략산업' 육성 펀드 10조 원 조성

선거명	제21대 대통령선거							
후보자명	황 교 안	황 교 안 기호 7 소속정당명 무소속						
공약순위 : 6	제목 : 국가안보	체계 전면	· 재정비	분	야	국방 · 통일 · 외교통상		

□목표

- 경찰로 이관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복원함으로써, 간첩 검거 역량 강화
- 한 · 미동맹 강화로 북한의 핵 · 미사일 위협에 강력 대응

□이행방법

- 국정원법 개정 ⇨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복원 법안 발의
- 간첩법 개정 ⇨ 간첩 행위 처벌 대상을 '적국'에서 '외국'으로 확대
- 한 · 미 동맹 강화 및 한 · 미 · 일 3각 동맹 강화
- 한 · 미 연합 군사훈련 강화
- 9 · 19 군사합의 전면 폐기 및 최전방 감시 · 방어 체계 전력 복원
- AI 기반 자율드론 · 감시체계 · 사이버 방어 시스템 구축
- 군 복무 기간 중 안보 정신 재무장 교육 및 디지털 전쟁 대응 훈련 의무화
- •대통령 직속 '국가 안보 대혁신위원회'를 설치, 안보 시스템 전면 재정비
- 민·관·군 연계 사이버·심리전 대응센터 운영

□ 이행기간

- •취임 즉시 9 · 19 군사합의 전면 폐기 통보 및 국정원법 개정 법안 발의
- 6개월 이내 AI 기반 자율 드론 전력화 사업 추진, 사이버전 대응 전력 확대
- □ 재워조달방안 등
- 미국 등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소요 예산이 결정될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추계 불가

선거명	제21대 대통령선거						
후보자명	황 교 안	기호	소속정당 명		무소속		
공약순위 : 7	제목 :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				야	정치· 행정· 사법	

- •최근 2톤 5조 원 규모의 코카인 강릉 밀반입 사례에서 보듯, 더 이상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 아니므로 '마약청'을 신설 및 단속 강화를 통해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
- •전 국민 대상 마약 예방 교육 강화함으로써 예방에 더 많은 노력 집중

□이행방법

- 마약청 신설(마약관련 수사 및 정보 총괄 기관) 및 마약청법 제정
- 마약사범 엄벌(감형없는 중형 법제화)
- •국내 수사기관뿐만 아니라, 미 마약단속국(DEA), FBI 등 해외 마약 단속 및 수사기관들과의 국제적인 공조 체계를 한층 공고화, 마약사범 검거에 주력
- 마약중독자를 위한 병원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강화
- 각급 학교 및 일반 국민 대상 마약 예방교육 강화

□이행기간

•취임 즉시 추진하여 임기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

- 일반, 특별회계 및 기금 예산 편성 확대
- 재정 지출시기 조정 및 재량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마련

선거명	제21대 대통령선거							
후보자명	황 교 안 기호 7 소속정당명 무소속							
공약순위 : 8	제목 : 둘째 출신	2억 드림	등	분	야	재정 · 경제 · 복지		

• 저출산 문제는 청년들의 취업, 주택, 아이돌봄, 교육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으므로 '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'를 만들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

□ 이행방법

- 신혼 부부에게 '행복한 나의 집' 제공
 -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신혼 가구에 매년 16만 가구의 주택 공급
 - 입주시 본인 부담없이 입주하고, 입주 3년 후부터 30년 분할 상환(저리)
- '부모보험 제도' 도입
 - 육아휴직 급여를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(월 최대 300만 원씩 일 년간 지급)
- '출산장려제도' 확대
 - 첫째 출산시 1억 원, 둘째 출산시 2억 원 등 출산 장려금 지급
- 양질의 보육시설 확충
 - 5년간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, 공공 보육시설 이용률을 50%까지 상향
- '자동육아휴직제'를 법제화
 - 출산과 동시 육아 휴직하게 함으로써 직장 내 눈치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
- '초 · 중등생 돌봄제도' 확대
 - 초·중등생 대상으로 촘촘한 온종일 돌봄 서비스 제공

□ 이행기간

•취임 즉시 추진하여 임기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

- 일반. 특별회계 및 기금 예산 편성 확대
- 재정 지출시기 조정 및 재량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마련

선거명	제21대 대통령선거							
후보자명	황 교 안	기호	7	소속정당명 무소속				
공약순위 : 9	제목 : 내국인 우 희망 사다리 구축		진 청년	분	야	교육・인적자원		

- 현 연공서열 문화를 불식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과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'청년 패스트 트랙'경로 마련
- 청년들의 계층 상승 사다리를 통해 유능한 젊은 인재들이 팀 리더로서 지도적 위치에서 국가와 사회를 혁신해 나가는 시스템 구축

□이행방법

- 내국인 역차별 금지 및 외국인 우대 정책 폐지
 - 의대 등 대학 입시에 내·외국인 동일 전형 적용
- '청년 패스트트랙 정책'실시
 - 사회 각 분야 인재를 선발·지원할 수 있도록 '전담 기구' 설치
 - 사법시험 부활 및 K-컬처 종사자 지원 정책 강화
 - 인재 유학 및 해외 싱크탱크에서의 정책 연구 및 연수 기회 확대
 - 출중한 실력과 열정을 겸비한 청년 인재들에게 고위직 진출 기회 부여
 - 30~40대라도 장군, 차관, 교장, 치안감, 치안정감이 될 수 있는 제도 도입
 - * 사관학교 출신이 아니더라도 장군으로, 순경 출신이 치안감·치안정감으로, 고시 출신이 아닌 9급 공무원 출신도 차관까지 승진, 30~40대 교장 및 교육청 실·국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
- 장·노년층의 군 경계업무 투입을 통한 청년들의 병역 부담 경감

□ 이행기간

•취임 즉시 '청년 패스트 트랙'을 가동하여 임기동안 지속적으로 추진

- 일반, 특별회계 및 기금 예산 편성 확대
- 재정 지출시기 조정 및 재량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마련
- 공약 우선순위는 지출 효율화(재량지출 감축, 성과를 반영한 조정 등)를 추진 하고, 필요시 재정당국 및 국회와 협의

선거명	제21대 대통령선거							
후보자명	황 교 안 기호 7 소속정당명 무소속							
공약순위 : 10	제목 : 자유통일	국가 비전	l 달성	분	야	국방 · 통일 · 외교통상		

□목표

- •도둑처럼 다가올 통일에 대비하여 사전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
- •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통일 대비를 하지 못할 경우 중·러 등 주변 강 대국들이 북한 지역에 진주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가능성 차단 필요
-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저조한 상황에서 정부는 통일 과정 관리뿐만 아 니라 통일 후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적 상황 및 역할 인식 제고 필요

□ 이행방법

- •정부 차원
 - 각 부처별 통일 대비 현실적 정책 마련
 - * 일레: 법무부는 통일 후 법제관련 검토 제정, 가족법 검토 제정 등
- •대통령 직속 통일위원회를 설치하여 '통일대박 프로젝트' 추진 준비
 - 통일 관련 재정 부담 문제 해결을 위해 일정 기간 '남북 분리관리'
 - '유효 수효 원리'에 따라 통일 후 경제적 난제 해결 준비
- 민간 차원
 - 북한 주민들의 자유민주주의 및 자본주의 교육 프로그램 마련
 - 과도 기간 중 북한 주민을 지원할 '10만 통일꾼(통일+일꾼)'확보
 - 통일 후 사회적 제도, 관습, 언어적 차이 등 남북 주민간의 의식 간극 보완
 - '통일꾼'에 대한 정기 교육 및 훈련, 네트워킹
 - 통일이 국력 확대의 호기라는 대국민 인식 전환 캠페인 및 교육 실시

□ 이행기간

•취임 즉시 추진하여 임기 동안 지속 시행

- 일반, 특별회계 및 기금 예산 편성 확대
- 재정 지출시기 조정 및 재량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마련
- 공약 우선순위는 지출 효율화(재량지출 감축, 성과를 반영한 조정 등)를 추진 하고, 필요시 재정당국 및 국회와 협의